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합시다

기고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전남에 부임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농업 현장을 다니다 보니 벌써 4월 중순이 됐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들인 꽃들이 순서대로 흐드러지게 피는 모습을 보며 농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곧 쌀농사를 시작하는 논과 양파와 마늘이 자라는 밭에서 분주해질 농민들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무겁기도 하다.

농촌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일손 부족문제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의 총인구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그 수치가 확연히 드러난다. 2023년 65세 이상 비율이 전국 읍 지역은 19.3%, 면 지역은 33.3%로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15년의 65세 이상 비율(읍 14.4%, 면 26.9%)과 비교하면 읍은 4.9%, 면은 6.4% 각각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주요 10대 농산물 품목을 재배하는

데 필요 인력은 1000만명에 달하며 이중 40%가 넘는 439만 명이 농번기인 4~6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협이 4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영농 지원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개최해 전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 이유다.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함평군 대동면을 찾아 전남농협 영농지원발대식을 실시했다.

농협 임직원, 광주대학교 학생,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함께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조생양파하우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양파를 수확하고 즐거움을 자르는 작업을 펼친 바 있다.

전남농협은 2025년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40개소의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증개센터는 중개수수료가 없으며 농번기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장점이 많다.

2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필요한 기간에만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공공형계절근로 실시 농협을 16개소로 확대하여 기존에 외국인근로자를 상시 고용해야 했던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다.

고령화로 인해 농사짓기가 힘들어지

는 농민들을 위해 농작업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력이 약하고 경지면적이 적어 농기계를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소농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여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함께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 참여 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과의 업무협약은 기존에 광주대학교와 초당대학교 2개 학교에서 올해에는 순천청암대학교와 제일대학교 등 총 4개 학교로 확대한다.

학생들이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위해 농촌을 찾아올 때면 차량과 간식, 식사 등을 지원해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한 농산물을 편하고 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범국민 농촌 일손 돕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국민들께서도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일손 돕기에 동참하여 농촌의 맛을 느끼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社說

기억과 연대로 더 안전한 세상 만들어야

세월호 침몰 원인 '내인설' 결론

탐승객 304명을 숨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선체 복원성 불량 등 내인에 따른 것이라는 사법부의 결론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외력에 의한 침몰설'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배제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올해로 11년. 사법부의 이번 결론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14일 민주당 이성운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목표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의 세월호 재결서에 따르면 심판부는 지난해 11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내인설'로 결론지었다. 심판부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48분께 세월호의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배가 기울 것으로 봤다. 조타기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타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돌아가면서 화물이 쏟아지고 선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쓸렸다는 것이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에 무게중심 위치가 높아지면서 복원성

이 떨어진 점도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는 21세기 일어난 가장 큰 대형 참사다.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국민이 받은 충격도 엄청났다. 하지만 구조를 외면한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했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는 여지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과 군·정보기관 자료들도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아리셀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우리는 사회에서 대형참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무책임은 물론이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참사를 잊은 사회는 결코 안전해질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함께 생명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법률을 통해 제도화시켜야 한다. 국민 모두가 유족들에게 했던 '기억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시민의 의지와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전화위복 기회 삼아야 할 전남 의대 무산

새정부·의료계 등 대타협 절실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인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다. 현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결국 올해 의대생 수업 복구를 전제로 정원을 동결하면서 의대 신설이 어려워진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남국립의과대학의 2026년 개교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통해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의대신설 의지를 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동력을 잃었고, 의료계와의 협상조차 못해본 채 백기를 들었다. 결국 전남도의 의대신설 꿈도 산산이 무너졌다. 아직 좌절해서도 안된다. 정부를 설득해 의대신설 목표까지 가기위해 수없는 노력을 해왔다. 의대신설을 놓고 동서지역 간 갈등도 풀려났다. 목포대와 순천대간 '대학 통합'을 통해 의대 신설 명분과 설득 논리까지 만들었다.

전남도는 2026학년도 의대 개교는

어렵다고 보고,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우선 오는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에 전남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전남도와 목포대·순천대, 의료계 등으로 의대신설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공동준비위원장은 양 대학 대외협력부총장이 맡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과 대학 기획처장, 의료기관장 등 20명 안팎으로 위원이 구성될 예정이다.

2027년 개교가 이뤄지려면 정부와 의료계 간 타협이 절실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현 정부의 접근방식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정원확대와 별개로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한 의대신설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남은 의대신설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보여왔다. 2026년 개교가 물거품 됐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6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을 멈추고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3일(현지 시간) 스페인 세비아에서 한 참가자가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안고 속죄 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종려 주일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주 일요일이다.

AP/뉴시스

서석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지자체 간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각 지자체의 현안 사업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대선을 기회로 보고, 공약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현안 대부분이 외면받았던 터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크다. 더구나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어서 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약 선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조기 대선에 발맞춰 발빠르게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총사업비 81조원 규모의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발굴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인공지능 전환(AI)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 등이 핵심이다.

강기정 시장은 공약 발굴과 함께 곧바로 국회로 달려가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 방향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 반영과 차기 정부에서의 국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강 시장은 대선 기간 서울 여의도에 집무실을 차리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서울에 머물며 대선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남도 역시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솔라시도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191조원 규모의 핵심과제 75건을 지역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 건의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전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전남 미래발전 중대형 프로젝트' 과제 발굴에 주력해 왔으며, 윤 대통령이 파면되자 이를 즉시 전남지역 공약으로 전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안한 현안들은 모두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이슈들이어서 이번 대선을 통해 반드시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조기 대선인 탓에 선거일까지 시간이 매우 짧다. 당장 정당별 경선이 실시되는만큼 더욱 촉박하다. 지역 정치권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시한 지역 현안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 경선에서 지역구 의원 대부분은 이재명 전 대표 지지나 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 전 대표의 공약에 지역 현안들이 대거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